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요양 통합돌봄 광주광역시 현장 간담회 실시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6일(수) 오후 2시,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본사업 시행에 대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이번 현장 방문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및 본사업 실시를 앞두고,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개선할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취지를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의료와 요양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 '23.7월부터 실시, 131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119개소)

정은경 장관은 광주시청, 광주 북구 소재 영구임대 돌봄 특화마을(오치주공1단지), 광주 북구 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광주광역시 및 광주 북구의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한편, 담당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현장간담회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운영 현황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투입, ▲동 주민센터 담당자의 가정방문 실시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요인을 공유하는 한편, 통합돌봄 사업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

* 광주광역시는 '23.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5개의 자치구별 특화 사업을 실시하면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참여 중(예산지원형 2개소, 기술지원형 3개소)

또한 실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신청·접수-조사-지원계획 수립-통합지원회의 실시-서비스 연계- 모니터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일선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여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성과와 과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2026년 3월 통합돌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와 요양이 아우러진 통합돌봄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붙임> 1. 의료·요양 통합돌봄 광주광역시 현장방문 개요
2.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 개요
3.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책임자	과 장	장영진 (044-202-3030)
		담당자	팀 장	박준형 (044-202-3041)
			사무관	김수명 (044-202-3034)

붙임 1

의료·요양 통합돌봄 광주광역시 현장방문 개요

□ 개요

- (목적)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준비를 위한 현장의견 청취
- (일시) '25. 8. 6.(수), 14:00 ~ 17:30
- (장소) ①광주광역시청(중회의실), ②북구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③북구 보건소
-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노인정책관,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구청 및 주민센터 담당자 등

□ 주요일정

구분	일정		주요내용	비고
티타임	13:40~14:00	20'	· 사전 티타임(광주광역시장)	
1부 정책· 체계	14:00~14:05	5'	· 개회,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광주광역시청
	14:05~14:25	20'	·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사업현황 보고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광주다움 통합돌봄	
	14:25~14:35	10'	· 5개 자치구 강점 활동 보고	
	14:35~15:25	50'	· 시 돌봄 정책 현장간담회	
	15:25~15:30	5'	· 기념촬영	
이동	15:30~16:00	30'	· 이동(시청 → 오치복합커뮤니티)	
2부 실행	16:00~16:50	50'	· 구 돌봄 실행 현장간담회 ▲ 돌봄계획수립·확정, 통합지원사례회의 사례 ▲ 참여형 돌봄프로그램 운영 사례	북구 오치 복합커뮤니티센터 * 마을 돌봄공동체 거점공간
이동	16:50~17:10	20'	· 이동(오치복합커뮤니티 → 북구 보건소)	
3부 보건	17:10~17:30	20'	· 전국민 주치의제 현장간담회 ▲ 전국민 건강 주치의제 시범운영 현황	북구 보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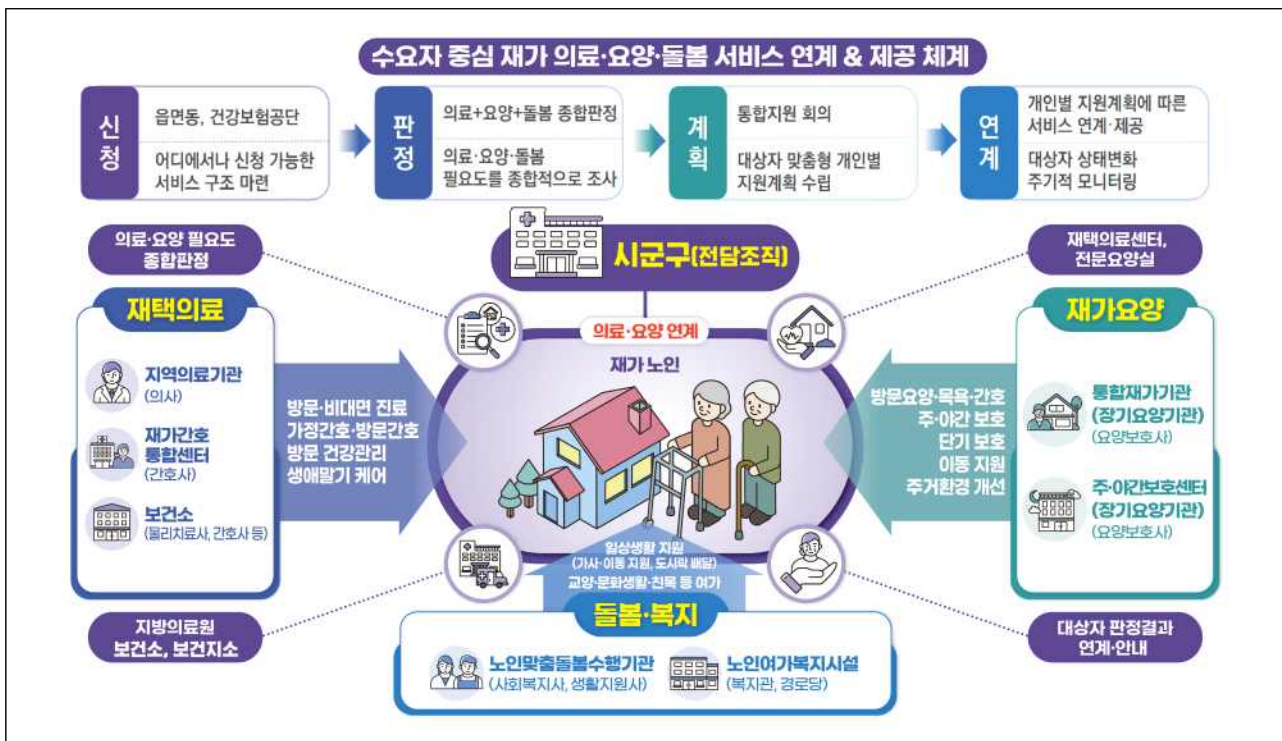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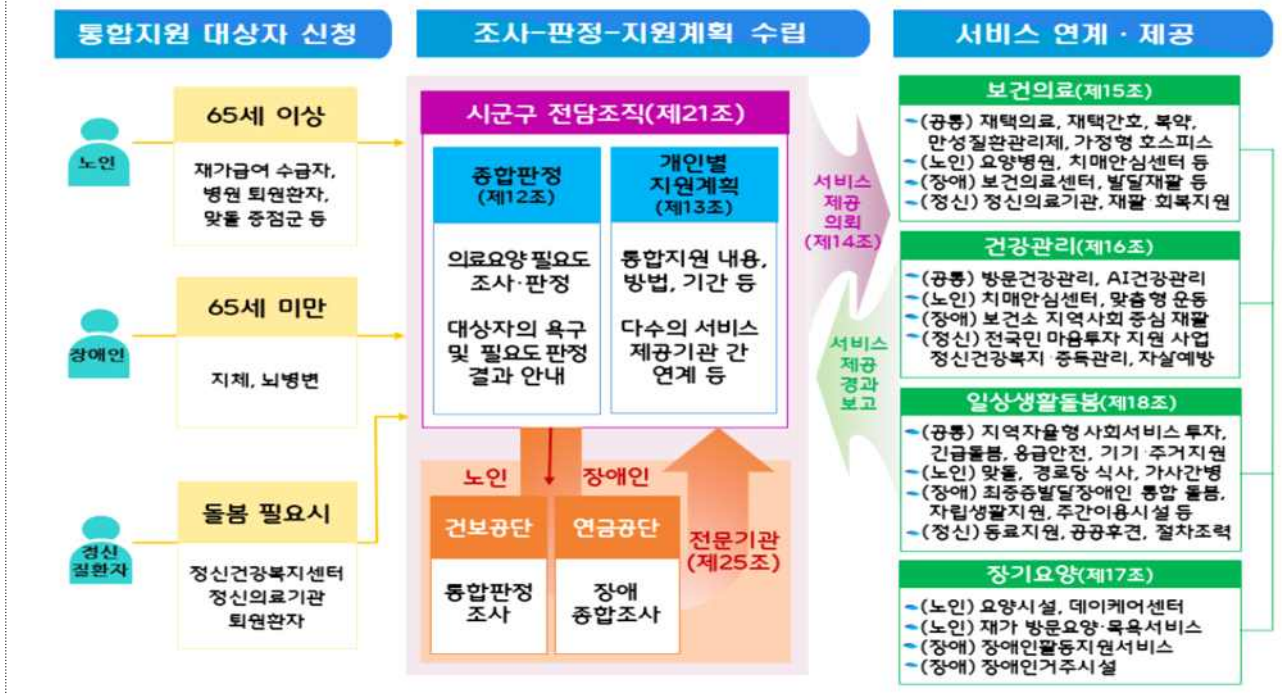
붙임 2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 개요

- ◆ '26.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전국 적용

- **(목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 **(대상자)**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노인·장애인이 아니어도,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시 대상자에 포함(복지부 사전협의 要)
 - **(지원내용)**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
 - **(지원절차)** ①신청→②조사→③판정→④지원계획→⑤서비스 연계→⑥모니터링
 - ① (신청) 사전조사 실시, 읍면동·건보공단 통해, 본인·가족 + 직권 신청
 - ② (조사) 통합판정조사 통해 필요도 조사(건보공단 수행, 지자체 동행可), 퇴원환자 등 긴급사례나 지역돌봄 중심사례는 지자체 직접 조사
 - ③ (판정) 통합판정조사 등을 바탕, 지자체가 필요도와 지원방향 판단
 - ④ (지원계획)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승인·조정하는 통합지원회의*(시군구 총괄) 운영
*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 건보공단, 서비스 제공기관(재택의료센터, 복지관 등) 참여
 - ⑤ (서비스 연계) 통합지원회의에서 수립된 서비스 지원계획에 맞춰, 의료·요양·돌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 ⑥ (모니터링) 일정 주기(3개월)로 적절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여부 및 대상자 상태변화 체크, 필요시 지원계획 변경
- ※ (종결) 사망·입원·욕구충족완료 등 중단 사유 발생 시 통합지원 종결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



붙임 3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개요

현재 131개 시군구 참여 중(전체 시군구 대비 57%), '25.8월 3차 공모 예정

①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12개 시·군·구)

- (목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본모델 정립
- (기간·규모·예산) '23.7~'25.12, 12개 시군구*, '25년 64.8억원(국비 5.4억씩 배정)
* 광주서·북구, 대전대덕·유성구, 부천·안산, 진천, 천안, 전주, 여수, 의성, 김해
- (대상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 장기요양재가급여자,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 및 장기요양등급외자(A,B), 장기요양 등급판정대기·불인정에 따른 일시적 돌봄필요자, 퇴원환자, 고령장애인
- (사업내용) △의료·요양·돌봄 통합적 사례관리, △재가노인 방문 의료서비스 연계·확충, △기관 간 협업체계 마련(전담조직 등)
* 장기요양, 일상생활지원 등 기존서비스 연계 원칙+부족한 서비스는 지자체가 보충적 개발·제공
- (전달체계) 신청·접수·발굴, 방문 조사, 제공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회의, 사례관리 등 시군구 본청 역할 강화
* (전담조직·인력) 시군구 본청 내 전담조직(과 또는 팀)과 전담인력(복지직+보건직+간호직 등)을 확보

② 기술지원형 시범사업(비예산) (119개 시·군·구)

- (추진배경·목표) 전국 확대 前, 경험과 추진 의지 높은 자체 추진 지자체를 우선 지원(비예산)하여, 표준모델 제공 및 방향성 제시
- (기간·규모) '25.1~, 35개소 / '25.5~, 53개소 / '25.6~, 31개소

서울(16) 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강서·금천·관악·송파·강동,
부산(11) 중구·서구·동구·동래·남구·해운대·사하·금정·강서·수영·사상, 대구(4) 서구·달서·달성·군위,
인천(2) 부평·계양, 광주(3) 동구·남구·광산, 대전(3) 동구·중구·서구, 울산(5)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
세종(1) 세종, 경기(18)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남양주·안양·평택·시흥·파주·의정부·광명·이천·안성·
포천·양평·여주·동두천, 강원(8) 춘천·원주·강릉·태백·속초·홍천·횡성·고성, 충북(10) 청주·충주·제천·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음성·단양, 충남(5) 아산·논산·부여·청양·태안, 전북(6) 군산·익산·정읍·남원·
김제·진안, 전남(16) 나주·광양·담양·고흥·보성·화순·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경북(5) 포항·경주·고령·성주·칠곡, 경남(5) 창원·진주·거제·창녕·남해, 제주(1) 제주

- (지원내용) 교육·전문 컨설팅 지원 및 건보 등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중점
*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전달체계 등은 예산지원형과 동일